

2018년 10월 13일 시행 / 2018년 지방직 7급 필기시험

행정학 기출해설 (A책형)

해설 - 최윤경 교수(수원행정고시학원)

문 1. 「국가공무원법」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?

- ① 행정안전부
- ② 국회사무처
-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
- ④ 법원행정처

정답 ①

해설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,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·결정하게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.

문 2.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.
-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.
-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.
-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.

정답 ②

해설 ②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가 아닌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특징으로 한다.

문 3. 거버넌스(Governance)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
- ②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
- ③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
- ④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

정답 ④

해설 ④ 이해당사자간 상호의존적 교환의 필요성 증가는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인 동시에 특징에 해당된다.

문 4.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대응적 책임(responsiveness)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·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.
-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,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

이 부각되었다.

- ③ 도의적 책임(responsibility)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, 이념,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.
-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, 국정감사, 직무감찰,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.

정답 ②

해설 ① [X] 대응적 책임(responsiveness)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, 이념,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.

- ③ [X] 도의적 책임(responsibility)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·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.
- ④ [X]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권한으로 내부통제 수단에 속하며,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으로 내부통제 수단에 해당된다.

문 5.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(BSC: Balanced Score Card)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.
- ②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.
- ③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④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.

정답 ④

해설 ④ 균형성과표는 개인이 아닌 조직(기관)의 성과평가를 위한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으로, 조직의 미션과 비전 → 전략목표 → 성과목표 → 성과측정 지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하향적 접근방법이다.

문 6.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집중화 경향 -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.
- ② 관대화 경향 -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.
- ③ 총계적 오류 -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.
- ④ 시간적 오류 -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.

정답 ③

해설 ③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규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. 총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.

문 7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,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정답 ③

해설

제11조(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)

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,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·도의 사무로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.

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(X)가 아니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.

제5조(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)

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

제9조(사무배분의 원칙)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, 시·군·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, 시·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④

제10조 (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)

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·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문 8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·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,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.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,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·지방공단이 포함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.

정답 ④

해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.

지방공기업법 78조의 2
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한 후 제출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1.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
2.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
3.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,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

문 9.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G2G(Government, Government)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, 정보 공유, 업무의 공동처리,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.
- ② G2C(Government, Citizen)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.
- ③ G2G(Government, Government)에서는 정부부처 간,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.
- ④ G2B(Government, Business)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,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.

정답 ③

해설 ① [X] G2G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, 정보 공유, 업무의 공동처리, 업무 유연성 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.
 ② [X] G2C는 정부와 시민 간에 관계변화를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, 시민의 요구에 대응성을 제고한다.
 ④ [X] G2B는 정부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로 정보교류비용과 조달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.

문 10. 덴하트와 덴하트(J. V. Denhardt & R. B. Denhardt)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(new public service)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.
- ②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.
- ③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.
- ④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.

정답 ①

해설 '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.'

*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원칙(Denhardt & Denhardt, 2003)

- ①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하라.
-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.
- ③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(citizenship)의 가치를 받아들여라.
- ④ 전략적으로 사고하고, 민주적으로 행동하라.
- ⑤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.
- ⑥ 방향잡기보다 봉사하기를 하라.
- ⑦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'사람'의 가치를 받아들여라.

문 11.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품목별 예산제도(LIBS)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.
- ② 계획예산제도(PPBS)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,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.
-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(MBO)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.
-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(PBS)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.

정답 ③

해설 ③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제도(ZBB)에 대한 설명이다.

문 12.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(BTO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,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.
- ②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, 주로 도로·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.
- ③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,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.
- ④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(BTL)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,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.

정답 ③

해설 ③은 BTL방식에 대한 설명이다.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, 민간사업자가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한다.

문 13. 매트릭스(Matrix)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.
- ②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'규모의 경제'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'스피드의 경제'를 보장한 방식이다.
- ③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.
- ④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.

정답 ②

해설 ② 팀제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평적 조직구조로, 계층으로 축소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진 조직(스피드의 경제)이다.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조직구조이다.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 간 권한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하기 어렵다.

문 14.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.
- ② 프로그램 예산분류(과목) 체계는 분야-부문-프로그램-단위사업-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.
-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(품목)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.
-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·도입된 제도이다.

정답 ①

해설 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는 2007년, 지방정부는 2008년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.

문 15.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목표의 다원화(multiplication) 및 목표의 확대(expansion)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.
- ② 목표의 전환(diversion)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.
- ③ 목표의 대치(displacement)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,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중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.

④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, 비공식적 목표다.

정답 ②

해설 ②는 목표의 승계(succession)에 대한 설명이다. 목표의 전환은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는 목표의 대체 현상을 의미한다.

문 16. 민츠버그(Mintzberg)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,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(유형)가 달라진다. 강조된 조직구성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전략적 정점(strategic apex) - 기계적 관료제 구조
- ② 핵심운영(operating core) - 전문적 관료제 구조
- ③ 중간계선(middle line) - 사업부제 구조
- ④ 지원참모(support staff) - 애드호크라시(adhocracy)

정답 ①

해설 ① 조직의 최고관리층에 해당하는 전략적 정점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구조는 기계적 관료제가 아니라 단순구조에 해당한다.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기술관리부문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.

문 17. 리플리와 프랭클린(Ripley & Franklin)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배분정책(distributive policy) -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(log-rolling) 또는 포크배럴(pork barrel)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.
- ② 재분배정책(redistributive policy) -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(SOP)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.
- ③ 경쟁적 규제정책(competitive regulatory policy) -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.
- ④ 보호적 규제정책(protective regulatory policy) -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.

정답 ③

해설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, 권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 장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규제정책과 분배정책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. 항공노선 허가, 방송국 설립인가,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이 해당되는데, 규제정책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.

문 18.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(natural experiment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연실험은 준실험(quasi-experiment)이 아닌 진실실험(true experiment)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.
- ②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

적다.

- ③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(shock)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.
- ④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.

정답 ①

해설 ① 자연실험은 자연적인 사건이나 정책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 사건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비교하는 실험으로서, 인위적인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실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. 따라서 자연실험은 진실험보다는 준실험에 가까운 방식이다.

문 19. 공론조사(deliberative polling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.
-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.
- ③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,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
- ④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.

정답 ②

해설 ②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다(O). 그러나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보다 상대적으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④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공사를 재개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.

문 20.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(A ~ D)으로 분류할 경우,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	배제성	비배제성
경합성	A	B
비경합성	C	D

-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<u>A</u> | <u>B</u> | <u>C</u> | <u>D</u> |
| ① 구두 | 해저광물 | 고속도로 | 등대 |
| ② 라면 | 출근길 시내도로 | 일기예보 | 상하수도 |
| ③ 자동차 | 공공낚시터 | 국방 | 무료TV방송 |
| ④ 냉장고 | 케이블TV | 목초지 | 외교 |

정답 ①

해설 ① A-사적재(구두), B-공유재(해저광물), C-요금재(고속도로), D-공공재(등대)

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	배제성	비배제성
경합성	사적재(민간재)	공유재
비경합성	요금재	공공재(집합재)

공무원저널